

분뇨차 운영과 돼지 인공수정을 시행하는 여/주/지/부

-추용진-

1988년에 창립한 여주지부(지부장: 윤상익)는 28명의 회원과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 2명,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뇨처리의 문제가 축산의 존폐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해진 가운데 여주지부는 4년전부터 분뇨차를 운영하여 지부회원들의 분뇨처리를 돋고 있다.

92년 3월에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 받아 구입한 분뇨차는 4년간 회원들에게 이용되었으나 노후로 인해 금년에 50% 보조, 20% 융자, 30% 자부담으로 재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분뇨차는 회원들에 한해서 하루 10만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저장조나 3단 정화조에서 정화된 분뇨를 살포할 초지를 확보하여 지부에 신청하여 이용하는데 대부분의 분뇨는 인근 낙농농가들과 협의하여 옥수수 등의 초지에 뿌려준다. 봄·가을에는 이런 액비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 분뇨차가 바빠진다고 한다.

한편 스크레파로 분뇨를 분리수거하는 회원농가에서는 농협과 계약을 맺어 돈분을 유기질 비료화한다. 양돈농가는 250만원하는 5톤 용량의 돈분탱크를 구입하여 돈분을 유기질비료로 판매를 한다.

쌀로 유명한 여주는 도정공장에서 왕겨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돈분과 왕겨를 혼합·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있다.



▲ 윤상익지부장과 여직원 강원구씨의 모습

회원들의 인공수정 유도로 질병방역과 원가절감 꾀해

윤상익지부장은 “협회는 양돈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양돈농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압력단체”라고 전제하면서 “회원이 아닌 농가들이 중앙회와 지부에서 하는 활동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회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윤지부장은 회원농가들에게 정부의 자금배정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많이 뛰어다니는 한편 군청, 농촌지도소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주지부는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양돈현안과 각 회원간의 양돈경영의 문제점 등을 토의하고 두달에 한번씩 질병, 인공수정, 사양관리 등에 대하여 세미나를 갖고 있다.

오제스키 질병 등 방역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 여주지부는 다비AI센타와 상원축산과 계약을 맺어 회원들에게 인공수정용 정액을 공급하고 있다.

농가에서 AI센타에 정액신청을 하면 AI센타는 정액을 여주지부 사무실에 비치된 온장고에 넣어 두고 신청한 농가는 사무실에서 인공수정용 정액을 가져가 인공수정을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농가에게 정액을 공급하면 정액수송차량에 의한 질병감염을 막을 수 있고 농가는 3,000원씩 하는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정액의 원가가 절감되고 있다. 여주지부는 전 회원에게 인공수정을 확대보급함으로써 회원농가들의 인공수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한편 여주지부에서는 축산기자재 업체와 계약을 맺어 양돈농가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회원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

여주지부는 대부분의 회원농가가 남한강 상수원 보호지역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경제단위인 축산경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지부는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지부회원들이 양돈장의 증·개축을 포함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용자담보 능력부족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수원 보호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윤상익 지부장은 상수원법개정 소위원회인 지역국회의원과의 교류를 통하여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축산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상수원 보호와 연관된 축산업의 현안문제에 대한 발표와 축산규제완화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

여주지부에서 건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축사의 신·증축에 많은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경제단위의 축산을 어렵게 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분뇨처리시설 허가기준이 일반지역보다 1/2이 축소되어서 적용(돼지의 경우 축사 연면적 500m² 이상)되고 방류수질도 더욱 강화되어 있어 용자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양돈농가가 축산분뇨 처리시설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 분뇨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축사규모를 확장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 ▲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운영자금은 양축가 부담으로 하되 시설 설치는 수익자(시민) 부담으로 할 것 ▲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개별 농가도 공동처리 시설 지원과 같이 취급하여 그 운영자금을 보조하여 줄 것 등이다.

농가들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전개

윤상익지부장은 앞으로의 지부활동 계획에 대하여 여주군내의 양돈농가들이 합심할 수 있는 회원배가 운동에 주력할 것이며, 농가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대한 바람은 양돈농가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상수원 보호법 개정을 해주어야 하며, 정책 담당자들은 양돈산업을 식량안보 차원으로 인식하여 외국산 육류에 시장이 잠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윤상익지부장은 중앙회가 양돈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중앙회, 지부 그리고 농가와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융화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여주지부 뿐 아니라 각 지부들이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양돈인으로써의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수입 완전 개방을 앞둔 양돈산업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버티어 갈 것이다.